

6·25 전쟁과 분단의 내재화 - 점령, 수복의 체험을 반추하면서

김 동 춘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1. 머리말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반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조국 통일을 급속히 달성하는 민족적 과업" 성취와 "남반부를 이승만 역도의 반동 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개시한다고 선포하였다. 북한은 6·25의 개전을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미제국주의 지배'를 반대하는 일종의 민족해방 '혁명'이라고 보았다. 한국전쟁의 개시는 좌우익간의 정치적 갈등,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무력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유엔군 참전 이후 북한 점령(수복)을 한 후에 점령정책을 소련공산주의의 지배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남한의 1948년 헌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으로 간주하였다.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은 모두 민족을 '외세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민족주의적 구호 하에 전쟁 수행과 점령을 정당화하였으며, 북한은 '인민의 해방'을 강조하였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것처럼 전쟁이란 "우리의 적대자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물리적인 힘은 하나의 수단

이고, 적으로 하여금 의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일사분란하게 단결해야 하고 적은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부를 결속시키고 적을 무장 해제하기 위한 행동은 모든 전투 행위에 수반된다. 전쟁이 국가간에 발생한다면 바로 전쟁은 국가의 목표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힘으로 국가가 적국을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데 자신의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여기서 누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교전 당사자는 상대방을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을 무장하게 하기 위한' 작전 그리고 국방, 국가 안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 이러한 전쟁의 본질이 점령정책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데 점령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패배한 지역의 주민들을 자신의 복속 하에 두는 과정이다. 점령 측은 피점령 지역마다 자신의 정치경제 질서를 강압적으로 이식한다. 점령이 전쟁의 연장인 한 점령 정치는 권력의 극대화로서 그 자체가 독재체제이다. 점령은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또 피점령지의 민중들이 점령군을 완전히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틈만 나면 반항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억압과 감시 체제의 일상화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이 단순히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인종적 적대에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전쟁의 성격보다는 국가 내의 계급적 갈등, 정치적 갈등의 연장으로서 발생하는 '혁명'을 명분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점령의 정책 역시 혁명의 수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반혁명 세력의 탄압의 내용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점령시 일상화되는 극도의 억압, 통제, 감시, 처벌 정책은 '혁명'의 대의로서 정당화될 것이다.

내전(civil war)으로 출발한 한국전쟁이 미국과 중공의 개입으로 국제전(international war)으로 발전하면서 전선이 한반도의 남북을 수차례 이동하

였기 때문에, 남한 대부분의 지역은 두 차례 점령의 경험을 겪었다. 그것은 38선 이남의 주민들은 ‘국가’가 바뀌는 일을 두 번 이상 겪었다는 말이 된다. 점령 정책은 이처럼 전쟁 수행이라는 목표에 종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체제’ 체험을 느낄 여유보다는 전쟁 과정에서 생존해야 할 요구에 더욱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전쟁의 공포와 위기가 이후에는 특정 체제, 정책에 대한 공포와 위기로 정리, 상징화되면서 분단을 내재적으로 고착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과 수복 후 이승만 정권의 부역자 처벌 정책 등을 살펴보면, 6·25 전쟁이 어떻게 남한사회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내재화로 귀결되었는지 살펴보고, 장차 북한 당국과의 대화 혹은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내재화된 반공반북 의식이 전쟁을 겪지 않은 독일과는 달리 어떻게 한반도만의 특수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2. 북한의 점령정책과 그 교훈

6월 28일 인민군이 서울 지역을 점령하면서 인민군 및 지역에 숨어있던 좌익은 대한민국에 협력한 사람들을 색출,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26일에 김일성은 방송을 통해 “후방을 철용성같이 다져야 한다”고 한 다음 “도피분자, 요언(妖言) 전파분자를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밀정, 파괴분자를 적발 숙청하고…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반동분자, 비협력분자, 도피분자를 적발하여 무자비하게 숙청하라”는 김일성의 호소문이 시내 곳곳에 게시되었다. 한편 북한의 ‘남조선 해방’이란 45년 직후 북한에서 실시해온 ‘민주개혁’, 즉 토지개혁, 중요 산업의 국유화, 단일하고 공정한 세납제와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8시간 노동제의 실시 등을

남한지역에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남한의 점령정책은 북한이 46년 3월 23일 발표한 '20개 정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남한의 토지개혁을 예정한 법조문과 남한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주로 남한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반민주적 반인민적 법률의 무효화, 토지개혁 법령, 산업국유화 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 법령 실시' 등이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승만 정권에 협력한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함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인 토지개혁을 남한에 실시하여 북한정권의 지지기반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숙정 대상 선별 기준과 과정을 보면, 북한 점령의 정치적, 계급적 성격을 읽을 수 있다. 남한 지역을 점령한 북한은 "국군장교와 판검사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면장, 동장, 반장 등은 인민재판에 부친다"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국가기구의 핵심 구성원인 군인, 판검사, 경찰 간부, 우익단체나 정당의 간부 등은 '적'으로 취급하여 처형하고, 말단관리나 중간적인 인물들은 면밀하게 검사하여 '국민'으로 편입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이승만 정부에 반대한 사람은 '국민'으로 취급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내무서 등에서의 취조 과정을 보면, 미국 유학 경력, 혹은 재산 소유 등도 남한에 충성을 바친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표였다. 한편 지식인은 소부르주와적인 중간계층으로서 멸시되었다. 결국 북한은 6·25 이전에 그러하였듯이 친일, 친미, 반공의 활동을 한 사람들을 '적'으로 취급하였는데, 이것은 역으로 왜 과거 일제에 협력했던 세력들이 그렇게 반공, 반북 전선에 앞장서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친일경력자, 친미주의자, 지주나 부르주와로 분류된 사람들, 특히 노동자를 착취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처벌 대상이었다. 남한 정권

하에서 경찰관, 민보단원, 대한청년단원, 동회직원, 월남자들이 주요 처벌 대상이었다. 민족반역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재산은 압류되었다.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의 물산을 등록하며 이를 처분할 데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등록된 재산은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부는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부는 농민들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점령정책,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실시했던 토지개혁은 '농민 혁명'의 일종이었다. 그것은 이미 세력이 약화된 지주세력을 제거하고 예속 상황에 있던 농민을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혁명이 그러하였듯이 이 혁명은 노동계급이 실제로 주도하는 혁명이 아니라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노동계급을 당이 대신하여 추진한 대리혁명이자 조속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건설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농민층이 다수인 사회에서 민주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농민들이 농민위원회 구성이나 운영과정에서 독자성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들의 자연 발생적 계급 적대 의식은 전통적 지배계급을 붕괴시키는 데는 기여했을 것이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즉 북한이 실시한 토지개혁은 이후 남한 정권이 보다 구 지주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기여했을 것이지만, 이들 농민들을 근대적 주체로 형성시키는데는 반드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후 남한에서 농민층이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보더라도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농민층은 오히려 이러한 강압적인 힘에 의해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경험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순응주의를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북한 인민군 점령시 서울에 잔류하였던 대한민국의 엘리트층은 45년 직후

소련군이 그러하였듯이 인민군이 마치 정복자로서 행동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인민군에 의해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지위나 권위가 완전히 무시된데서 초래된 반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공산주의를 극히 혐오했던 사람은 그렇다고 차더라도 막연히 공산주의 이론에 공명했거나 그들과 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식인들까지 북한의 점령정책을 비판한 것을 보면 북한의 점령정책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중도적인 인사들을 격렬한 반공주의자가 되도록 만든 것은 전쟁 상황이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나 분명히 북한이 체제 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 측면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Hayek)가 비판하는 바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측면들, 혹은 전시공산주의 혹은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의 체제 일반의 한계, 소련 혹은 스탈린과 레닌에 대한 지나친 추종적 정신 상태, 공산주의 이론과 품성으로 충분히 무장하지 못한 북한의 당 간부와 인민군의 한계 등 모든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토지개혁 작업 등 점령정책이 지지기반 확대에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개혁, 혹은 혁명 조치가 전쟁이라는 상황에 의해 퇴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에게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생활 조건의 개선' 보다 더욱 일차적 인데, 전쟁 상황이 전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개혁조치는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만약 전쟁이 극히 단기에 마무리된다면 후자의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지연되면서 '인민'을 위한다는 전쟁의 명분은 점점 퇴색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북한측으로서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전쟁이 민간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의의 전쟁'이라는 훌륭한 목표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전쟁, 혹은 폭력이라는 수단은 그 목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인민’들에게 과정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투쟁론, 혁명론은 앞의 이승만의 마키아벨리즘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정의의 전쟁’이라는 목적 윤리를 강조한 나머지 노동자, 농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였다. 전쟁은 “가난한 사람을 제일 먼저 굶주리게 만들고, 제일 먼저 죽어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3. ‘수복’ 후 이승만 정권의 부역자 처벌

이승만 정권은 9·28 수복 후 피난을 간 자, 그리고 피난을 가지 못했더라도 전쟁과정에서 북한에 부역하지 않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 ‘충성스러운 국민’과 ‘의심할 만한 국민’의 가장 일차적인 구분은 인민군 점령 무렵 한강을 넘어서 피난을 갔던 ‘도강파’와 서울에 남아 있었던 ‘잔류파’의 구분에서 시작되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승만은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낙관적 보도를 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사실상 ‘부역을 강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도강파’는 국민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 피난간 자들이므로 다리가 끊어진 서울에서 생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부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은 서울이 수복되자 마치 ‘정복자’처럼 서울에 입성하여, “서울에서 살아 남은 사람이 ‘국민’인지 ‘적’과 내통한 자인지 심사하자”는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결국 9·28 수복 후 서울에서는 북한에서 월남한 자, 피난을 간 자는 ‘공산주의에 반대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신분 증명서를 갖는 셈이었다.

수복 이후 서울은 물론 지방 각지에서도 부역자로 혐의를 받은 남녀 동포들

이 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초만원에 이르렀다. 50년 11월 13일 현재 남한 각도에서는 5만 5천9백 명의 부역자가 검거되었다. 천안의 경우 800여 명의 부역자들이 유치장에 있었다고 한다. 전국에 걸쳐 몇 십만을 헤아렸는데, 즉결 재판으로 사형을 위시하여 무기징역, 30년 징역, 15년 징역, 5년 징역 등의 언도를 받은 부역자들이 우글우글하였다. 조병옥 내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 본 의가 아닌 또는 피동적인 부역자에 대해서는 민족의 아량으로 관대히 포섭한다고 발표하였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연명으로서 부역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김준연 법무부 장관과 상의하여 경무대를 방문하고 이 대통령과 동반하여 서대문 형무소를 몸소 시찰하였다. 여기서 이 대통령에게 진언하여 사형은 무기, 무기는 15년, 15년은 5년, 5년 이하의 징역 언도를 받은 사람은 모두 석방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로 석방된 자는 서울에서만 3만 명이였다. 즉 부역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생존을 위해 부역한 경우는 면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유엔 한국위원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 당시 비상조치령(특히 4조) 위반으로 391명의 피고가 서울 지방법원에서 판결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중 242명은 전쟁 이전에 이미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제재의 완화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차별과 천대는 계속되었다. 즉 빨갱이의 낙인은 사실상 개인을 매장시킬 수 있는 무서운 폭력이였다. 이후 조봉암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지방에서는 부역의 혐의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국민노릇을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아무리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 한 마디 못하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은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을 마치 '서자' 혹은 '이등 국민', '적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심지어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경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밤마다 술

과 고기를 대접하기도 했으며, 피난 떠났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경찰들은 부역자로 분류되거나 창고 등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을 끌고 나와 총살을 벌이는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도 수복 당시 빨갱이로 분류된 가족들의 처지를 잘 그리고 있다.

그들은 나를 빨갱이 년이라고 불렀다. 빨갱이고 빨갱이 년이고 그 물만 들었다 하면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고 나발이고 인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빨갱이를 색출하고 혼내줄 수 있는 기관은 수도 없이 난립돼 있었고, 이웃이 우리를 계속 수상쩍게 여기는 한 나는 그들의 밥이었다. ... 그들은 나를 마치 짐승이나 벌레처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 주었다. 벌레처럼 기었다. 그들에겐 징그러운 벌레를 가지고도 오락거리를 삼을 수 있는 어린애같은 단순성이 있었다(박완서, 『그 많은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즉 빨갱이의 낙인을 받는 사람은 ‘사이비 한인(韓人)’ 혹은 ‘비국민’의 취급을 당하였고, 인민군과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은 아무리 동족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골육지친(骨肉之親) 간이라고 해도 총검거하여 토멸(討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생존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었다. ‘부역행위자 특별처리법안’은 바로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으나 정치 사회적 구별 조치이기도 했다. 특히 월북자의 가족은 ‘국민’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상당수의 월북자 가족은 집단학살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국민’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재산의 박탈이 그러하고,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 그러하며, 연좌제를 통해 공무원은 물론 직장 선택에

서도 제약을 받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군, 경찰, 방첩대 및 사설단체로부터 설새없는 조사와 압력에 직면하여 상당수의 젊은 남성들은 이러한 '비국민'의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입대를 하기도 한다. 30년이 지난 80년까지 지속된 연좌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지만, 실제 부역자이거나 부역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사실상 '이등 국민'으로 대접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통제체제로 작용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수복 후 정책 역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나, 다수의 국민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김일성 정권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포용하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차별 위주의 정책은 이후 이승만 정권의 붕괴, 박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되면서 남한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임하지 못하는 배경이 된다.

북한의 선제 점령으로 이루어진 남북한 국가의 동일한 주민에 대한 '국민' 편입 작업을 보면 북한의 경우 일제시대의 친일의 경력을 고려하였으나, 남한의 경우 주로 인민군 점령 하의 부역의 사실만을 중점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또 사회주의 북한은 일단 '적'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 즉각적인 처형이나 납치의 방법을 택하였으나 법원과 재판 제도를 준수하는 자유주의 남한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에로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후자가 전자에 비해 권력당국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한다면 양자의 차별성은 거의 없었다고 도 볼 수 있다.

4. 전쟁의 정치사회학적 교훈 - 분단의 내재화

해방 당시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며 내부의 계급간의 갈등이 별로 크지 않았으며, 기독교 신자와 엘리트층이 많았던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였으며, 반대로 지주와 소작인간의 갈등이 비교적 컸고,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했다는 사실이 좌익과 우익 간의 정치적 갈등을 훨씬 증폭시키는 구조적인 배경이 되었다. 특히 대지주가 지배했던 남한 지역에 비해 북한지역, 특히 서북지역은 소규모 자영농과 같은 ‘중간계급’이 더욱 압도적인 범주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대지주나 대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박탈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간층을 이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월남한 사람들이 이북 정권에 대하여 극도로 비판적인 태도가 그들의 계급적 지위의 위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진술에는 상당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은 김일성 정권이 주창한 혁명, 혹은 조국해방의 이상을 ‘전쟁 수행’이라는 목표에 종속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정치과정과 동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전투의 일환으로 수행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전시체제 하에서는 모든 정책이 국가권력의 일사분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전쟁중 북한 권력 치하에서건, 대한민국 치하에서건 ‘사적인’ 갈등과 증오는 법의 집행 혹은 공권력의 행사를 압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방과 혁명의 대의는 민중들의 즉자적인 분노와 보복심에 의해 압도당할 수도 있다. 자연발생적 원인과 그것에 대한 보복은 ‘혁명’의 언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혁명을 내건 전쟁은 실제로는 그 혁명에 의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정되는 세력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혁명'의 가치를 내건 전쟁이 실제로는 전쟁 그 자체의 '혼란'과 '공포'에 의해 가려지고, '혼란'과 '공포'가 전쟁의 경험으로 내재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쟁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적과 나'의 이분법을 강요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의 정치이념, 즉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도록 강요하고, 또 사람들을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분한 다음 자신의 편에 선 사람은 용서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과도정치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도정치화' 상황은 '중간적 범주'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도정치화 상황은 경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균열에 종속시킨다. 왜냐하면 과도정치화 상황은 정치의 본질이 그러하듯이 '생과 사', 즉 목숨과 관련된 것이나 후자는 삶의 처지와 조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도정치화'는 모든 사람들을 특정의 정치이념을 견지한 존재로 간주하거나,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전쟁이라는 과도정치화 상황은 혁명과 전쟁의 복합 국면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민중들은 생활의 개선보다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정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하게 정치화된 전쟁 상황에서는 국가의 신격화, 신앙대상화를 초래하였다. 근대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으나 전쟁상황에서 정치이념, 즉 반공 혹은 사회주의가 신앙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바로 특정 국가가 표방하는 정치의 신도가 되기를 요구하였으며, 설사 신도가 되었다는 것을 서약한 경우에도 과거에 다른 신을 존중한 사례가 있으면 그의 전향, 세례 사실을 의심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다. 즉 이제 국민은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고도, 정치의 이념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그 신을 믿는다고 무조건 서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서약해도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은 변덕스러운 신의 뜻에 달렸다.

한편 전쟁은 인민의 지배가 실질적으로는, 공명심을 앞세우는 기회주의적인

특집

인물, 생존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것을 불사하는 인간형,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 ‘인민’을 가장한 불량배, 가장 악질적인 인간이 영웅이 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은 국군 치하이건 인민군 치하이건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의 교체에 의해 구 정권 하의 기득권자가 죄인으로 돌변하는 순간에 이들 불량배들은 바로 신 정권의 대리자로서 재산을 탈취하는 등 사적인 보복을 가하는데 앞장을 서게 된다. 인간이 무기와 권력을 소지하고서도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거나 멸시한 사람을 향해 행사하지 않고, 또 개인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불량배, 조직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하층민에게 권력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개인적인 원망, 복수심, 자기 과시욕이 견잡을 수 없이 폭발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전쟁과 점령의 체험은 공포의 내면화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져오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극우반공주의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쟁은 국가권력을 전지전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민중들로 하여금 더욱 복종적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퍼스넬리티를 갖게 만들어 준다.

4. 맺음말

짧은 기간이었다고는 하나 3개월간, 혹은 1, 2개월간의 인민군 치하의 체험은 오늘의 한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집단적인 원체험’으로 정식화되었다. 그것은 한국 측의 시각에서 보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가장 생생한 비교 기간이요, 실험 기간이었다. 전쟁 이후 남한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정당성 및 군사정권의 등장은 모두가 ‘북한’ 통치 시절의 부정적 기억이 반사적으로 결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45년에서 50년에 이르는 북한 체험과

더불어 전쟁 중 점령지에서의 북한 체험은 북한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공식적 이미지로 구축되어 지난 50년 동안 계속 재생산되어 왔다.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로 체제경쟁은 일단락되었고, ‘인민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 여지도 없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 남한의 극우세력들은 점령기의 기억을 반복 재생할 필요가 없어졌다.

점령과 수복이 반복되면서 남북한 어느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식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으나 민중들에게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일차적으로는 전쟁의 중지, 평화질서만이 희망이었다. 따라서 ‘해방’ 시켜 주리었다는 인민군의 명분은 민중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타당한 말일 수도 있으나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한도에서는 ‘거짓구조’가 되어버린다. 북한이 수행한 토지개혁이 아무리 농민들에게 매력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농민들을 전선으로 곧장 동원해야 하는 전쟁 상황에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었다. 점령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은 튼튼한 반석 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평가는 비록 지식인들의 체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이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이승만 정권을 목숨을 걸고라도 옹호하려는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점령의 체험은 이승만의 권력을 안정화시켰고, 대한민국의 국가 토대를 튼튼하게 해 주었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호전성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극우정권을 더욱 단단하게 해 주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우리는 점령 체험을 통해 무력을 통한 통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점령 하에서 이루어진 많은 문제점들이 반드시 김일성 정권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과정에서 고통에 빠뜨리게 되고, 남한 정권은 이러한 고통을 ‘반공’의 담론으로 흡수하였다.

특집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한에서 공식화된 북한 체험, 공산주의 체험이라는 것도 다분히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며, 지식인과 지배층의 경험이 과대표장된 것이며, 그것은 이후 남한의 반공주의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남한의 공식화된 점령 체험에서도 냉전의 그늘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출발한 남한 정권 역시 점령 정책을 주로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만 활용해 왔으며, 그러한 치열한 갈등과 차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남북한 당국이 통일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경우, 각각의 전쟁 하 점령기 해석들이 크게 충돌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점령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서 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한이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